

“옥시 부당해고자 복직 이행하라”

노조 10일 본사앞 결의대회 “중노위 36명 복직 명령”

최근 중앙노동위원회가 지난해 11월 해고된 옥시레킷벤키저 익산공장 노동자 36명의 복직을 명령한 것과 관련해 노동자들이 사측의 조속한 이행을 요구하고 나섰다.

옥시노조는 10일 서울 여의도 옥시 본사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가습기 참사와 마찬가지로 정리해고에서도 사측의 무책임함이 반복돼 노동자들이 고통받고 있다”며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복직 결정을 즉각 이행하라”고 주장했다.

지난해 8월 옥시 사측은 경영 악화를 이유로 물먹는 하마, 옥시크린 등을 생산하던 익산공장 폐쇄를 결정하고 지난해 10월 공장을 해태HTB에 매각했다.

사측은 회사 매각 시 고용승계가 불가능하다며 직원 100여명에게 희망퇴직을 받았으며 이를 거부한 직원 36명은 매각 결정 후 정리해고했다. 당시 사측은 “가습기 살균제 문제로 인한 불매운동 등으로 심각한 경영상 위기에 처해서 매출이 급감해 정리해고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지난 5월 지방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인정, 복직, 체불임금 지급 등의 결정을 받았지만 사측은 가습기 살균제참사에서도 보여주었던 듯이 책임 회피와 시간끌기로 일관하며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며 노동자들을 또 한 번 고통 속으로 내몰았다”면서 “오는 11일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사측의 부당해고에 대한 불법성과 노동위원회 결정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는 이중적이고 부도덕한 태도를 국민들에게 강력히 폭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노조는 10일 본사 앞 집중 결의 대회를 시작으로 11일 국정감사 대응 고용노동부 앞 집회를 계획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이어오고 있는 국회 앞 1인 시위도 이어간다. 특히 매일 오전 11시 옥시 본사 앞에서 부당해고를 규탄하고 복직 결정 이행을 촉구하는 집회도 열기로 했다.

문형구 옥시노조 위원장은 “옥시 사측은 시간끌기와 책임회피로 사태가 심각해진 가습기참사의 교훈을 되새겨 부당해고에 대한 사과와 중앙노동위원회의 복직결정을 즉각 이행하라”며 “행정법원까지 간다면 옥시 노동자들을 극한의 상황으로 내모는 것으로 결단코 용납할 수 없으며 더욱 강력한 투쟁으로 맞설 것”이라고 밝혔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노동계 “사회적 대화 거부 기재부에 적폐청산위원회 설치를”

오늘 ‘공공기관 노정위’ 촉구 결의대회
기재부 “관련 운영위원회 이미 운영중
임금피크제 폐지 등 의제도 수용 못해”

노동계와 기획재정부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업종별위원회인 ‘공공기관 노정위원회’의 구성과 참여에 기재부가 반대하고 있어서다.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는 “기재부가 사회적 대화를 거부하고 있다”면서 “김동연 경제부총리를 경질하고 (기재부 내에) 적폐청산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사회적 대화를 하지 않겠다는 게 아니라 공대위의 몇 가지 주장을 수용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각을 세웠다. 공대위는 11일

세종기재부청사앞에서 결의대회를 갖는다.

공대위는 지난 8월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공공기관 노정위 설치를 요청했다. 행정안전부와 고용노동부는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기재부는 달랐다. 당시 김용진 기재부 2차관은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에게 “기재부가 이미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필요하면 여기에 소위원회를 꾸리면 된다”며 “굳이 공공기관 노정위에 참여할 필요를 느끼지 못한다”고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의 반대로 공공기관 노정위 구성이 어려워졌다. 공대위는 기재부가 관할하는 공운위에선 노동계의 목소리를 전달하기가 어렵다고 보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노동계에서 사회적대화기구 참여를 요청했다. 공대위는 이런 기재부의 반대가 국정 기조에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공대위 관계자는 “이날 사회적대화 기구 출범과 김 부총리의 경질을 요구하는 대정부투쟁에 돌입한다”고 강조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공공기관의 방만한 운영을 정상화하고자 도입한 제도들을 다시 의제로 올리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공대위는 노정위를 구성하면서 2014년 삭감했던 공공기관 복리후생비 정상화와 임금피크제 폐지를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는 또 공대위가 구상하는 노정위 구성이 노동계 5명에 정부 인사 3명만 참여하는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지적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위원 구성을 최소한 동수로 해야 한다”면서 “공공정책이 민간에 파급되는 영향력을 고려하면 경영자 대표도 참여해야 하는데 공대위가 반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오경진 기자 oh3@seoul.co.kr

총파업 예고한 민노총… 국감시즌 맞아 정부·재계 동시압박

오늘부터 잇따라 집회 강행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 반발

■ 노동계가 10일부터 시작된 국정감사 시즌에 맞춰 정부와 재계에 대한 동시 압박 움직임에 분주하다. 다음 달 7일로 예정된 총파업의 투쟁 동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사전 정지 작업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특히 2년간 29% 오른 최저임금 정책의 대안 중 하나로 중소기업, 소상공업 업계가 주장하고 있는 지역별·업종별 차등화 방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수용될 경우 사회적 대화 참여도 거부할 것으로 알려져 추이가 주목된다.

노동계에 따르면, 민주노총은 이날 국회 앞에서 국정감사 재벌 개혁을 촉구한 뒤 서울 마포구 대흥동 한국경영자총협회, 용산구 한강로3가 LG유플러스 사옥 앞에서 동시에 원·하청 불공정거래 중단, 근로자들의 노조 할 권리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을 요구하는 규탄 집회를 열었다. 11일에는 서울 강남구 역삼동 삼성 그룹 사옥, 양재동 현대기아차 사옥, 12일에는 종로구 신문로1가 금호아시아나 사옥, 중구 명동 롯데백화점 앞에서 '재벌

규탄 집회'를 연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고용노동부 국감이 열리는 11일 세종시 고용부 청사 앞에서 노동기본권 보장 투쟁 결의대회를 벌인다.

정부가 공을 들이고 있는 사회적 대화 재개 여부도 노동계가 노동 현안과 염이 제동을 걸 가능성이 커졌다. 민주노총은 오는 17일 67차 임시정책대의원대회를 열고 총파업 결의대회를 연 뒤 새로운 사회적 대화 기구 참여건, 총파업결의문 채택건 등을 의결할 예정이다. 11월 7일에는 전국 동시 지역별 총파업, 10일 전국노동자대회, 11월 말에서 12월 사이 전국민

중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지난해 대선 직후 사회적 총파업을 강행했다가 '정치 파업' 비난에 휩싸인 것을 의식해 이번에는 이달 중 의제별·조직별·지역별 결의대회를 여는 등 차근차근 총파업을 준비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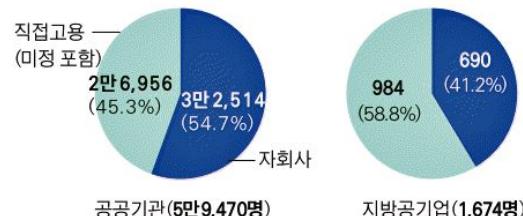
경영계 관계자는 "고용위축 등 최저임금 인상 부작용이 잇따르자 야권을 중심으로 최저임금 지역·업종별 차등 적용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며 "노동계가 이에 맞서 정부와 재계를 압박하는 등 투쟁 강도를 높이고 있다"고 말했다.

정진영 기자 news1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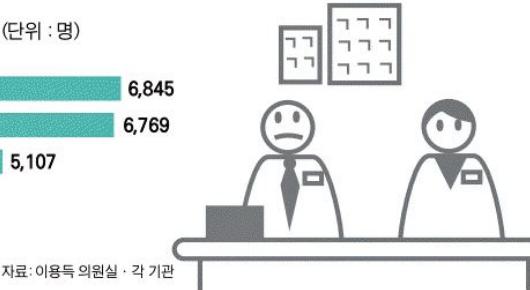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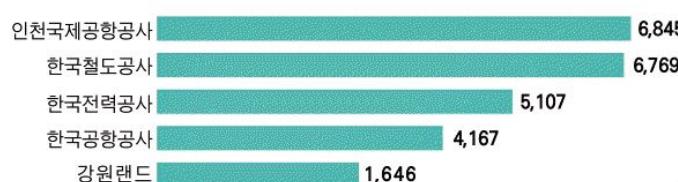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2명 중 1명은 자회사로

〈파견·용역 근로자〉

정규직 전환 비정규직 비율 (단위 : 명)



자회사 전환 비정규직이 많은 기관 상위 5곳 (단위 : 명)



자료: 이용득 의원실 · 각 기관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은 지난해 7월 정부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발표 직후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올 3월까지 신속하게 협의를 진행, 파견·용역업체 소속이던 공단과 공단 소속 병원 10곳의 시설관리직과 콜센터 직원 1,464명을 공단이 직접 정규직으로 채용했다. 파견·용역 비정규직 전원을 원청인 공단이 직접 고용한 것이다.

또 다른 고용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잡월드는 현재 파견·용역 388명의 전환 방식을 두고 노사가 극심한 갈등을 겪고 있다. 잡월드 사측은 파견·용역 388명을 원청에서 직접 고용하면 감당이 안 된다며 자회사 설립을 통한 우회 고용 방식을 결정했다. 파견·용역 노조는 일방적 자회사 전환에 반대하며 파업을 했다. 작년까지만 해도 소수의 시설관리직 중심으로 정규직 전환이 논의될 때만 해도 직접 고용이 논의 대상에 있었지만, 올 3월에 뒤늦게 파견·용역 체험강사의 정규직 전환이 논의되면서는 아예 직접 고

**원청의 직접 고용 기본 취지 무색
'예외 허용' 자회사 간접고용 증가
정부 '바람직한 자회사 모델
노·정 협의 거쳐 발표할 것'**

용은 논의 대상에서도 빠졌다"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 7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국정과제 1호'로 야심차게 발표했다. 그러나 확인 결과 정규직으로 전환된 파견·용역 근로자 2명 중 1명은 해당 공공기관(원청)이 아닌 자회사에 간접 고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파견·용역과 같은 간접 고용의 폐해를 덜겠다는 취지로 추진된 정책임에도 절반 이상이 사실상 간접 고용이나 다름없는 형태로 남아 있는 것이다. 특히 정책 동력이 초반보다 떨어진 것을 틈타 자회사를 통한 채용을 밀어붙이는 기관이 늘어나는 추세다.

1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용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 공공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기업과 준정부 기관 334곳에서 원청 소속이 아닌 자회사 소속 정규직으로 전환된 비정규직 수자는 33개 기관 3만 2,514명이었다. 이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의 파견·용역 비정규직 중 정규직 전환이 확정된 5만 9,470명의 절반이 넘는(54.7%) 비율이다. 지방공기업 149곳 역시 전체 파견용역 전환결정 대상 1,674명 중 약 41%인 640명(4곳)이 자회사 소속으로 전환됐다.

당초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보면 원청의 직접 고용이 기본이고, 자회사 전환은 예외적으로만 허용되는 방식이었다. 그러나 갈수록 자회사 채용은 예외가 아닌 기본이 되어 가는 모습이다. 자회사 채용은 고용 안정은 보장되지만 원청 직접고용에 비해 근로자 처우 개선이 어렵고, 별도 자회사를 운영하기 위해 관리 비용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기존 하청 방식과 크게 다를 바 없어 근로자들의 선호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공

성식 공공운수노조 정책기획국장은 "하청의 편리함을 아는 기관 입장에서는 근로자 관리 부담이 커지는 직접고용 대신 자회사를 통한 간접고용을 선호할 수밖에 없다"면서 "정규직화에 대한 정부 추진력이 떨어지며 기관들이 앞다퉈 자회사 설립을 남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물론 직무 특성상 자회사 채용 방식이 불가피한 경우도 있지만, 직접고용이 필요한 경우 조차도 자회사 설립으로 방향을 틀고 있다는 점이 문제다. 이용득 의원은 "정규직 전환의 기본 취지는 비정규직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 비정상의 정상화인데, 지금은 자회사로의 전환이 남발되고 있다"면서 "정책의 기본 철학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돌아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태훈 고용노동부 공공부문정규직화추진단 과장은 "자회사 정규직의 처우 개선과 전문성 강화 방안 등을 담은 바람직한 자회사 모델을 조만간 노·정 협의를 거쳐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성택 기자

5530명 공기업에… “용역 비정규직 7762명 직접 고용하라”

정규직 전환되는 공공 용역 직원들, 공공기관과 고용 주체 놓고 갈등

지난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한국도로공사와 강원랜드에서 일하는 직원 30여 명이 함께 마이크를 잡았다. 전국에 있는 고속도로 톨게이트(요금소)에서 요금을 받는 직원과 강원랜드 카지노에서 경비 업무 등을 담당하는 직원도 함께 있었다. 이들은 “정부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고 했는데 회사가 우리를 직접 고용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작년 5월 취임 직후 인천공항공사를 찾아 앞으로 공공 부문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선언했다. 1차로 정규직으로 전환될 기관은 853곳, 대상 인원은 15만4000명이다. 이 중 8만5000여 명(55%·8월 기준)이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갈등이 끊이지 않는다.

◇비정규직 “직접 고용 안 되면 무늬만 정규직”

정규직 전환 원칙이 결정됐음에도, 비정규직 근로자들 불만이 이어지는 이유 중 하나는 고용 주체가 누구냐 하는 문제다. 상당수 공기업은 지금까지 청소 등 업무를 용역업체나 협력업체에 채용된 근로자들을 파견받아 맡겼다. 지난해 정부의 정규직 전환 방침이 발표되자, 비정규직 직원들은 해당 공기업이 직접 고용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공기업 대부분은 “경영이 어려워져 직접 고용 어렵다”며 난처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전국 고속도로와 톨게이트를 관리하는 도로공사가 대표적이다. 전국에 있는 354개 톨게이트에서 근무하는 요금 수납원은 모두 6600여 명이다. 119개 용역업체 소속인 이들 가운데 6490여 명은 정

도로공사·강원랜드 비정규직

“본사 소속으로 정규직 해달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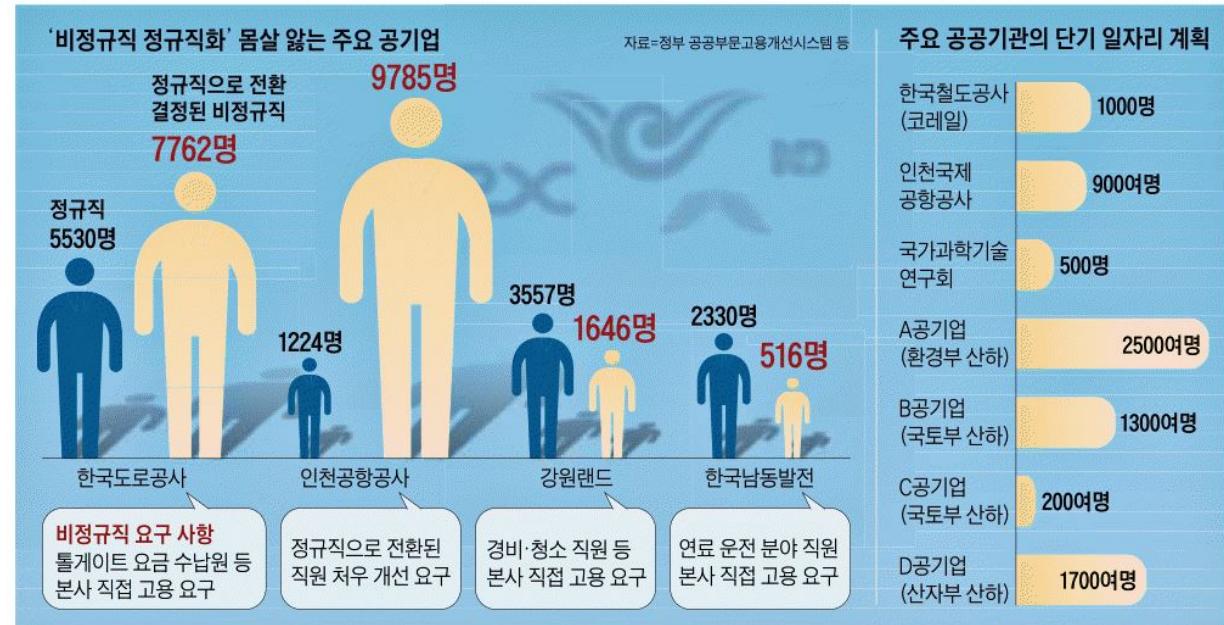
도로공사 “자회사 통해 고용”

공기업 대부분 “경영 어려운데…”

기존 정규직 노조와 劳勞갈등도

부지침에 따라 정규직으로 전환이 결정됐다. 도로공사 정규직 직원(5530명)보다 1000여 명 많다. 도로공사가 이들을 직접 고용하면 직원은 지금의 두 배인 1만2000명을 넘어선다.

이에 대해 도로공사는 자(子)회사를 통해 이들을 고용하겠다는 입장이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안 그래도 부채가 많은데 본사가 직접 고용하면 회사 부담이 견딜 수 없이 커질 것”이라고 했다. 그러자 일부 비정규직 근로자가 이강래 도로공사 사장 퇴진까지 요구하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

강원도 정선군에 있는 강원랜드 사정도 비슷하다. 강원랜드에는 정규직으로 전환이 결정된 21개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 1640여 명이 일하고 있다. 경비와 보

안, 청소, 주차 관리, 세탁 등이 이를 업무다. 이들도 지난해부터 강원랜드 본사에 직접 고용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회사는 난색을 표한다. 강원랜드 관계자는 “정규직 직원들 반발 등으로 직접 고용은 어렵다”고 말했다. 발전 정비 업무를 담당하는 한국남동발전 등 5개 발전 회

사 비정규직 근로자들도 자신들을 직접 고용해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직접 고용에 따른 갈등으로 공공기관의 정규직화 전환 속도는 점점 느려지고 있다.

◇노노(勞勞) 갈등 여전

직접 고용을 둘러싸고 기존 정규직 직원과 비정규직 근로자 간 노노 갈등도 계속되고 있다. 작년 11월 열린 인천공항공사 비정규직 전환 방식에 관한 공청회에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조 조합원들이 이 거친 설전을 벌였다. 자회사 정규직 직원이 된 비정규직 직원들은 본사 직원

들과 같은 처우를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인천공항공사 비정규직(6845명)과 코레일 비정규직(4954명) 직원들이 대표적이다. 한 공기업 관계자는 “인건비는 한정돼 있는데, 비정규직이 대거 고용되면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염려하는 정규직 직원이 많다”고 말했다. 또 다른 공기업 관계자는 “기존 정규직 직원과 임금 격차를 상당히 줄여야 하는데, 그 절차와 과정 등이 매우 복잡하고 어렵기 때문에 대부분의 공기업이 직접 고용을 꺼릴 것”이라고 했다. 광창렬 기자

주52시간 '꼼수' 만발…근무기록 막고, 휴연기록 늘리고

이정미 의원 'IT·제조업계' 사례 공개

지난 7월부터 주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됐지만, 연장·야간근로가 많은 정보통신기술(IT)업계에서 초과 노동시간은 기록에 남지 않도록 하는 방식으로 '공짜노동'을 시키며 법 위반을 피하려는 '꼼수가' 벌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10일 "아이티(IT)업계와 일부 제조업계의 주52시간 시행 상황을 조사한 결과, 많은 업체들이 유연근로제를 도입하면서 노동시간이 주52시간을 초과하면 '코어타임'(오전 10시~오후 5시)에도 노동시간 입력을 원천차단하고, '비근로시간' 입력을 활용하는 등 '꼼수'들이 만연해 있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이 밝힌 구체적인 사례들을 보면, 온라인 게임 개발·서비스업체 스마일게이트는 직원들에게 근무시간 입력시스템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근무시간에는 '플레이' 버튼을, 퇴근 시간에는 '정지' 버튼을 누르는 방식이다. 그런데 근무시간이 주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코어타임'인 오후 2시30분에 근무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이를 버튼이 눌러지지 않는다. 주52시간을 초과해 연장노동을 했더라도 그 시간은 기록이 안 되는 것이다. 화학섬유식품노조 스마일게이트 지회가 지난 6일 직원들을 대상으로 초과근로에 대한 실태조사

스마일게이트

근무버튼 안 눌러지게 비활성화
연장노동 아예 기록 안돼

넥슨

출장·외근 입력하려 하면
'수정 불가합니다' 메시지

SK하이닉스

휴게시간 많이 입력해
공짜로 연장·주말노동

KT CS

퇴근시간서 10여분 지나면
퇴근시간 입력 불가능

를 한 결과를 보면, 전체 응답자 331명 중 56명(17%)이 지난 7월 이후 실근로시간이 주52시간을 초과해 근무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게임업체인 넥슨도 출장이나 외근 등을 하게 돼 근로시간을 입력하려고 하면 "근로시간이 초과돼 수정이 불가합니다. 초과근로시간 1시간02분" 등의 메시지가 뜨면서 주52시간이 넘

는 노동시간 입력이 차단된다. 에스케이(SK)하이닉스에서는 휴연, 티타임 등 '추가 휴게시간'인 '비근로시간'을 근무시간 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이 회사 익명 채팅방에서는 직원들이 "52시간 넘기는 거 일상이라 토일 주말근무 중 자기 근무시간 어떻게 빼야 되나 고민하는 모습 자주 본다" 등의 푸념을 주고받는다. 늘 주52시간을 넘겨 노동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 '비근로시간'을 많이 입력해 '공짜로' 연장노동, 주말노동을 이어간다는 것이다. 고객서비스 기업 케이티씨에스(KT CS)는 퇴근시간에서 10여분이 지나면 "근무시간이 아닙니다. 근무시간에 신청해주세요. 실제 입력이 취소되었습니다"라는 메시지가 뜨면서 '퇴근'시간 입력이 불가능해진다. 이 경우도 역시 초과근로를 하더라도 시스템에 기록이 안 되는 것이다. 이에 대해 케이티씨에스 관계자는 "주52시간 제 취지에 맞게 연장근로를 줄이기 위한 조치"라고 해명했다.

이정미 의원은 "아이티업계가 유연근로제를 도입하면서 주52시간 근로시간 상한을 정해놓고 실제 근로시간 입력을 제한하거나, 비근로시간 입력을 통한 꼼수를 쓰고 있다"며 "노동부는 계도기간에 상관없이 법 위반 사항에 대해 철저히 관리감독을 시행해 이런 위법한 상황들이 시정되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규남 기자 3strings@hani.co.kr

“거부 땐 근로감독 하겠다”… 주52시간 실태 반강제 조사

(300인 이상 기업)

사법권한 있는 근로감독관 동원
고용부, 근로시간 단축 시행 전후 조사

준비 미흡 C·D등급 매긴 기업
출퇴근 내역 등 경영자료 감찰
고용부 “강압적 지시 아니라 독려”

고용노동부가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 기업의 인사노무 업무에 대한 사법처리 권한을 가진 근로감독관을 동원해 강압성 협장 실태조사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때문에 조사 결과의 신뢰성은 물론 정부의 민간 기업에 대한 월권 논란이 일고 있다. 고용부는 이 조사를 근거로 “기업의 70% 이상은 준비를 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탄력근로제와 같은 유연근무제 확대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고용부는 지난 5월과 8월 두 번에 걸쳐 300인 이상 3627개 기업을 전수 조사했다.

중앙일보가 입수한 당시 고용부가 각 지방 고용노동청과 지청에 시달한 업무지시서와 실태조사 계획서 등 관련 서류에 따르면 실태조사를 기업이 거부할 수 없도록 했다. 의명을 요구한 지방의 근로감독관은 “조사를 거부하는 기업에는 근로감독을 실시한다고 압력을 가해서라도 (조사서를) 받아내야 했다”고 밝혔다. 김왕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은 “이른 시간 내 정책 수요 파악을 위해 독려는 했지만 강압적으로 하도록 지시한 적은 없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조사 계획서에는 굵은 글씨로 ‘1차 조사 거부 기업에 대해서는 반드시 조사 실시’라고 적시했다. 기업이 거부할 수 없는 의무 조사로 진행한 셈이다.

조사 문항에 대해 의명을 요청한 한 근로감독관은 “자백 진술서처럼 구성돼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 감소 여부와 임금이 줄었을 경우 보전해주지 않는 이유를 적도록 했다. 경제단체 관계자는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고용효과를 조작하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노동시간 단축 2차 실태조사 계획	
□ 【추진 배경】 1차 실태조사(5.25~6.19) 및 법 시행(7.1) 이후 현장의 대응상황을 파악함과 동시에, 대중이 미흡한 기업의 지원·관리를 위한 기초자료 확보 목적	
□ 【조사방법】 1차 조사대상 소기업(3,627개소)에 대한 조사 추진	
○ 1차 조사 시 조사거부 기업에 대해서는 반드시 조사 실시	
○ 1차 조사 시 조사가 누락된 사업장(300인 이상 및 꿈공부문)*이 있는지 확인하여, 조사를 진행하고 대상 사업장 추가	
• 꿈공부문의 경우 일부한 꿈공부문기관리스트의 사업장에서 누락되었는지 여부확인	
○ 본사에 소속된 사업장*이 1차 조사 대상에 포함된 경우 조사대상에서 제외	
• 인사 노무 및 회계 등이 본사와 분리되지 않은 공장 및 지점 등	
○ CD등급 조사 시 근로자 출·퇴근 내역, 임금대장(7월 말 기준) 등을 반드시 확인하고, 실태조사서에 첨부하여 조사내용의 신뢰성 확보(조사 당시 7월 임금대장이 없는 경우에도 사후 확인 필요)	

고용부가 근로시간단축 준비가 미흡한 기업을 추출해 출퇴근 내역까지 뒤진 것으로 드러났다.

히 소득이 감소하는데, 임금 보전을 하지 않는 기업을 질책하거나 마치 법 위반인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 연장근로 한도 초과 근로자 수를 기재하게 하고,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인력 충원 계획과 실제 채용 현황을 1~2차에 걸쳐 보고토록 했다. 경제단체 관계자는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고용효과를 조작하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심지어 조사 결과를 토대로 기업을 A~D로 나눠 등급을 매긴 것으로 확인됐다. 근로시간 단축 준비가 미흡한 C·D 등급 기업에 대해서는 굵은 글씨로 ‘근로자 출·퇴근 내역, 임금 대장을 반드시 확인’ ‘조사 당시 7월 임금 대장이 없는 경우에도 사후 확인’이라고 명시했다. 실태조사라는 이름으로 기업의 경영 자료를 감찰한 꼴이다. 특히 D등급에 대해서는 ‘수시로 동향을 파악하고 집중 관리’하도록 지시했다. 모 기업 인사담당자는 “실태조사를 빙자한 경영 탄압”이라고 말했다.

이러다 보니 “기업은 제대로 실태를 적기보다 등급을 좋게 받기 위해서라도 정부 정책에 호응하는 듯한 응답을 택할 수밖에 없다”는 게 근로감독관과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조준모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는 “의명성이 보장되지 않는, 조사의 기본이 안 갖춰졌다”며 “이런 왜곡된 조사는 정책의 알리바이를 구하려는 시도로 비칠 수 있

다”고 비판했다. 권순원 숙명여대 경영학과 교수는 “정책과 관련된 조사는 불편부당한 방법으로 해야 한다”며 “사법권을 가진 근로감독관을 동원해 근로기준법 준수 여부를 조사하는데 ‘나 잡아가라’고 답변하는 기업이 있겠는가”라며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조사 과정에서 일선 근로감독관이 반발해 고용부 직장협의회가 이를 본부에 전달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고용부는 당초 7월 30일부터 8월 3일까지 실시할 예정이던 실태조사를 8월 10일까지 연장하고 문항도 일부 줄였다.

그러나 실태 조사 마감일 이틀 전까지도 ‘조사율이 20%도 되지 않는 관서도 확인된다’는 내용의 업무지시서가 내려갔다. 그런데 이를 만인 10일 100% 조사가 완료됐다. “조사 강요가 아니면 기업을 상대로 한 실태조사가 그렇게 순식간에 완료될 수 없다”(근로감독관)는 지적이 나온다.

김기찬 고용노동선임기자 wolsu@joongang.co.kr

2018년 10월 11일 목요일 016면 공공정책

주 52시간 사업장, 총 4만 3172명 신규 채용한다

고용부, 지난 8월 2차 실태조사

제도 시행 직전보다 채용 2배 증가

유연근로제↑·초과근무 근로자 '뚝'

주 52시간 근무제를 적용하는 사업장의 채용 계획 규모가 제도 도입 이후 2만명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이용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주 52시간 근무제 2차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주 52시간제를 적용한

300인 이상 사업장과 공공기관 3557곳 중 937 곳(26.3%)이 총 4만 3172명의 인력충원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실태조사는 지난 8월 3~17일 진행됐다.

앞서 고용부는 주 52시간제를 시행하기 직전인 지난 5월 25일부터 6월 19일까지 1차 실태조사를 벌였다. 조사 대상 사업장 3627곳 가운데 813곳(22.4%)이 2만 1115명을 채용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약 2개월 만에 채용 계획을 세운 사업장이 100여곳 늘었고 채용 규모도 두 배가량 확대됐다. 1, 2차 실태조사에서 조사 대상이 다소 차이가 난 이유는 사업장마다 인력

변동 등으로 주 52시간제 적용에서 빠지거나 새로 추가된 곳이 있었기 때문이다.

근무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탄력근무제를 비롯해 유연근로제를 도입한 곳도 늘었다. 유연근로제를 도입한 곳은 1037곳(29.2%)으로 1차 실태조사(830곳·22.9%) 때보다 207 곳 많았다. 주 52시간제가 적용된 곳 가운데 실제 노동시간이 주 52시간을 넘는 사업장은 583곳(16.4%)으로, 1차 실태조사(1454 곳·40.1%) 때보다 큰 폭으로 감소했다. 이의 원은 "우려와는 달리 주 52시간 초과근무 노동자가 줄고 기업의 인력충원 계획 규모가 늘어나는 등 제도 안착이 이뤄지는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오경진 기자 oh3@seoul.co.kr

“내 건강정보 팔지마”

상업화 우려에 반기

정부 의료정보 규제완화 움직임에 시민단체들 국민서명 운동 나서
보건·산업부, 빅데이터 플랫폼 추진
대형병원들도 공유네트워크 만들기

윤소하 의원 “상호 결합 상업화 우려”
복지장관 “민간데이터와 연계 안해”

“임신과 분만은 몇번 하셨나요?”, “자연 또는 인공유산했던 경험이 있다면 몇번이죠?” 산부인과 진료 때 의사들이 흔히 묻는 말이다. 분만을 할 때는 환자의 임신·분만·유산·출산 횟수 등을 보여주는 ‘산과력’이 기호로 표시된다. 이런 정보가 데이터화되어 병원들 사이에서 공유된다면, 나이가 보험사·제약사로 흘러간다면 어떻게 될까? 백미순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는 “성 폭력 피해자나 낙태를 경험한 여성들의 진료기록 등이 상업화되면 여성들이 각종 의료 혜택에서 배제당하고 사회적으로 낙인 찍힐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신질환 치료 정보, 가족력이나 유전병 등 민감한 의료정보도 마찬가지다.

정부가 개인의 의료정보를 둘러싼 규제를 완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과 관련해,

10일 무상의료운동본부·참여연대 등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개인 의료정보 상업화에 반대하는 ‘내 건강정보 팔지마’ 범국민서명 운동(<http://noselldata.jinbo.net/>)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추진 중인 의료정보 빅데이터 사업은 크게 3가지다. 첫째는 보건복지부가 추진 중인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사업으로 건강보험공단의 건강검진 정보, 질병관리본부의 유전체 정보 등 공공기관 4곳의 데이터를 결합해 ‘취약계층 건강관리’ 등에 사용하겠다는 내용이다. 둘째로 산업통상자원부가 시작한 ‘바이오·헬스 빅데이터 플랫폼’ 사업이 있다. 삼성의료재단 등 대형병원 39곳이 보유한 5천만명의 의료 데이터를 표준화해 공유하는 네트워크를 구축 중이다. 셋째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マイ데이터’ 사업인데, 개인이 자신의 건강검진 자료 등을 내려받아 건강관리서비스 애플리케이션(앱)에 제공하도록 할 계획이다. 앱을 운영하는 보험사·통신사 등에 개인 의료정보가 축적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와 관련해 과기부는 건보공단이 보유한 개인 진료기록 제3자 제공 등을 요구해 물의를 빚기도 했다.〈한겨레〉 5월치 1·5면〉 여기에 카카오·서울아산병원, 네이버·분당서울대병원의 협



민주노총·보건의료단체연합·진보넷·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들이 1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앞에서 개인 의료정보의 상업화에 반대하는 노동시민사회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업 등 의료 빅데이터 사업도 시장에서 본격화하고 있다.

정부의 이런 사업은 이날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논란이 됐다. 윤소하 정의당 의원은 “복지부가 추진하는 공공기관 의료 데이터 사업과 산업부 주도로 진행 중인 민간병원 의료 데이터 표준화 모델을 향후 연계시키려는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 복지부가 건보공단 등 공공기관 4곳의 의료 데이터를 표준화하는 사업을 추진

중인데, 이것이 39개 병원이 구축 중인 빅데이터 플랫폼과 결합해 상업화될 수 있다고 우려하는 것이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산업부 사업에 대해서는 복지부도 개인 식별 우려를 표명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개인 의료정보를 민간 데이터와 연계하지 않겠다”며 “(보험사에 제공할 우려가 있는) 과기부의 의료정보 요청도 검토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우석균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공동대

표는 “의료 데이터는 개인의 가장 민감한 정보를 담고 있어 자료가 아니라 ‘한 사람’ 그 자체”라며 개인 의료정보에 대한 규제완화가 아니라 자기 결정권과 통제권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한국은 주민등록번호가 존재하는데다 개인정보 유출이 자주 발생해 아무리 ‘가명 정보’로 처리해도 의료정보에서 개인을 식별해낼 위험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황예랑 기자 yrcomm@hani.co.kr

정부, 공기업·공공기관 압박 ‘단기 알바’ 수천명 채용키로

**기재부, 일자리 확대 지침 보내
코레일·인천공항공사 1900여명
LH는 최대 5000명 채용 협의중**

최악의 고용 참사로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정책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정부가 공기업·공공기관을 동원해 ‘단기 일자리’ 늘리기에 나섰다. 12일로 예정된 통계청의 9월 고용동향 발표에서 8년 만에 취업자 증가가マイ너스(-)로 전환할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공기업을 압박해 일용직·청년인턴 등 비정규직 채용을 통해 취업자 수를 끌어올리려 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고용동향 통계에는 1주에 1시간이라도 돈을 받고 일했다면 취업자로 잡힌다.

국토교통부 산하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전세임대주택 물색 도우미’ 명목으로 비정규직 170명을 뽑기로 했다. LH는 당초 120명만 뽑으려다가 기획재정부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170명으로 채용 규모를 늘렸다. 고용 계약 기간 50일에 세전 급여 199만원이다. LH가 전에도 계약직 도우미를 채용한 적은 있었지만, 각 지역본부에서 필요에 따라 수시로 뽑았었다. 하지만 이번처럼 본사 차원에

서 일괄적으로 채용 공고를 내진 않았다. LH는 이외에도 계약 기간 3개월 미만의 단기 계약직을 최대 5000명 정도 추가 채용하는 방안을 정부와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LH 관계자는 “협의 중인 건 맞는데, 정확한 인원은 미정”이라고 했다. 또 국토부 산하인 코레일도 체험형 인턴 100명과 단기 계약직 900명 등 총 1000명을 채용하겠다고 밝혔다. 인천국제공항공사도 연말까지 2개월간 단기 계약직 900여명을 고용하기로 했다.

과학기술부 산하 ‘국가과학기술연구회’도 500명을 두 달 단기로 뽑기로 했다. 연구회 관계자는 “연구 노트 정리 등 보조 업무를 맡길 예정이고 월급은 190만원 선”이라고 했다. 소요 예산은 19억 원이다.

농림수산식품부 산하 한국농어촌공사도 지난 1일부터 각 지역본부 차원에서 ‘농지은행분야 체험형 인턴 채용’ 공고를 냈다. 현재까지 총 8개 지역본부가 95명을 뽑는다는 공고를 냈다. 계약기간 2개월에 세전 급여 167만원이다.

이처럼 공기업과 공공기관이 갑자기 사람 뽑는 공고를 낸 것은 지난 2일 기재부가 ‘연내 단기 일자리 확대 방안 작성 요청’ 지침을 내려보내면서부터다.

곽창렬·홍준기·최원우 기자 A2면에 계속

과기부 장관 “고용지표 안 좋아 단기 채용 늘렸다” 시인

단기 알바 A1면에서 계속

기획재정부는 지난 4일에도 300여 개 공기업과 공공기관 실무자들에게 채용 인원 규모 등을 밝힌 서류 양식을 돌렸다. 같은 날 문재인 대통령은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결국 기업”이라며 “(고용 문제의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고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어 내도록 하는 데에 집중하겠다”고 했다. 기재부와 대통령이 잇달아 일자리 창출을 주문하자 공기업과 공공기관이 그 뒤 하루 이틀 사이에 2개월짜리 일자리 공고를 내기 시작했다.

기재부가 소집한 회의에 참석했던 한 공기업 관계자는 “우리 회사보다 더 많이 뽑게 된 회사도 수두룩하다”면서 “환

경부 산하 A공사는 2500여 명을, 국토부 산하 B공사와 C공사는 각각 1300여 명과 200여 명을,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D공기업은 1700여 명을 뽑을 거라고 했다”고 말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지난 2일 “이대로 가면 9월 고용동향 통계가 마이너스로 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지금 추세로 가면 연말까지 취업률이 계속 떨어질 가능성이 큰데, 정부가 여론의 포화를 피하려고 단기적으로 통계를 끌어올리려 한 것 같다”고 했다. 정부는 고용통계를 작성할 때 일주일에 한 시간 이상만 돈 버는 활동을 하면 ‘취업자’라고 분류한다. 공기업들이 한꺼번에 단기 일자리 수천~수만 개를 만들어내면 통계상 취업률이 올라가는 구조다.

이날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국정감사장에서 과기부가 고용지표를 개선하려고 단기 계약직을 채용했다고 시인했다. 유 장관은 “전체적으로 고용지표가 굉장히 좋지 않아 단기 일자리라도 빨리 고민하자는 취지였다”고 했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공공부문에서 단기 일자리를 늘리는 것은 자체에서 주로 하던 것인데, 중앙정부까지 그 일에 나섰다는 것은 그만큼 절박하다는 뜻”이라면서 “정부가 고용에 대한 철학도 해법도 못 찾다보니 단기간에 고용률을 올리고 실업률을 낮추기 위해 이 같은 일을 벌이는 것”이라고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일자리 대책 발표를 앞두고 수요 조사를 위해 업무 협조를 요청했을 뿐, 압박한 것은 아니다”라고 반론해왔다.

내일신문

2018년 10월 10일 수요일 019면 정책

“거래시간 연장으로 시간외근무 늘어”

증권노동자 장시간노동 사무금융노조 실태조사

지난 2016년 8월 증권거래 시간을 30분 연장한 뒤 대다수 증권업 종사자들의 시간외 근무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은 9월 18일부터 10월 5일까지 증권업계 노동자 2588명을 상대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70.0%가 증권거래 시간 연장 이후 시간외 근무가 늘어난 것으로 답했다’고 8일

밝혔다.

사무금융노조가 조사결과를 분석한 결과 2016년 8월 증권거래시간 연장 이후 2년 2개월이 경과한 동안 응답자의 71.8%에 달하는 노동자들의 시간외근무가 늘었으며 이 중 52.6%는 1시간 이상 시간외노동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시간외 근무를 하면서도 시간외근무 수당을 받지 못한다는 답한 응답자도 70.7%에 달했다.

회사 도착시간을 기준으로 출근시간은 7시에서 7시 30분에 출근하는 비율이 56.5%, 7시 30분에서 8시에

출근하는 비율이 32%로 집계됐다.

결국 88.5%에 달하는 증권노동자들이 8시 이전에 출근하고 있다. 퇴근시간은 영업직의 경우 4시, 관리직의 경우 5시임에도 6시 이후 퇴근하는 노동자들이 54.2%로 가장 많았다.

사무금융노조는 8일 국회 정론관에서 이런 내용의 설문 결과를 발표하고 “아무런 효과 없는 거래시간 연장이 철회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세평 기자

spjang@naeil.com

2조 일자리자금 받은 중소기업 324곳 중 111곳 고용 되레 감소

**정부 “고용 5.9% 늘렸다”고 발표
기업 별로 보니 34%는 협돈 써
“고용문제 재정만 의존, 시장 교란”**

바른미래당 지상욱 의원이 10일 산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일자리창출을 위해 마련한 ‘4차산업혁명 파트너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중 3곳 중 한 곳은 오히려 일자리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4차산업혁명파트너자금은 산업은행이 4차 산업혁명 관련 핵심분야 및 기반기술을 갖춘 중소·중견기업에게 우대금리로 대출을 해주는 정책자금이다.

지난해 문재인 정부가 일자리 창출 및 여건개선, 서민 생활 인정 지원 등을 위해 추가경정예산 10조3000억원을 편성할 때 만들어졌고, 지난해 11월부터 국내 기업 324곳에 2조38억원의 자금이 지원됐다.

하지만 산업은행의 ‘4차산업혁명파트너자금 세부 지원내역’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으로 111개 업체에선 2244개의 일자리가 되레 줄었다. 전체 기업 중 34.4%이며 일자리 수로는 8.1%에 해당한다.

300억원을 지원받은 A기업은 종업원 수가 지난해 6월 말 585명에서 올해 6월 385명으로 34.2%나 줄었다. 500억원을 받은 B기업도 지난해 6월 1736명에서 올해 6월엔 1642명으로 종업원 수가 감소했다. 50억원을 지원받은 C기업은 같은 기간 164명에서 22명으로 직원이 5분의 1만 남은 경우다. 특히 일부 대기업은 자금만 받고 일자리를 늘리지 않은 것이 적발되기도 했다.

이외 13개 기업에서는 변동이 없었으며 193개 기업에선 일자리가 증가했다. 7개 기업에선 현황 보고를 제출하지 않았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8월 국회 정무위원

4차 산업혁명 파트너자금 고용 효과

기업수(개)	감소	변화없음	증가	미제출
기업체수(개)	111	13	193	7
전체대비(%)	34.4	4	59.4	2.2
지원금액(억원)	5,323	251	14,110	354
전체대비(%)	26.5	1.3	70.4	1.8

자료: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

회에 ‘4차 산업혁명 파트너 자금 운용 현황’ 보고서를 제출하며 “지원기업의 종업원 수는 2017년 6월 말 대비 5349명이 증가하여 5.9% 증가했다”고만 보고했다. 하지만 34.2%의 기업은 일자리가 줄었다는 내용은 포함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국회 정무위 관계자는 “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3곳 중 1곳이 일자리가 줄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책임 추궁을 우려한 금융위원회가 평균을 약용해 큰 성과를 거둔 것처럼 자료를 만든 것 같다”고 지적했다.

자금을 지원받고도 종업원을 급격히 줄인 기업들이 나타난 것과 관련해 정부가 성과를 내려고 급하게 추진하다 보니 개별 기업에 대한 평가가 미흡했던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병태 카이스트 경영대학 교수는 “고용문제 해결을 재정에만 의존하는 건 단기적 응급치료에 불과하다”며 “시장을 교란하고 좀비 기업만 양산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지상욱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세금만 쏟아붓고 자금만 지원해 주면 일자리가 창출된다고 믿는 아마추어 정부라는 것이 입증된 것”이라며 “일자리는 기업이 경제나 경기가 좋아지고 사업을 확장함에 따라 고용수요가 있어야 가능한 것이라는 것을 빨리 깨달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유성운 기자

pirate@joongang.co.kr

말발굽에 차이고 공장서 사고나도 ‘나몰라라’

산재 모럴해저드 ‘여전’

작년 산재 은폐 1315건 적발 정부 감전사고 조사 예산 ‘0’

안전을 최우선시해야 하는 산업 현장에서 ‘은폐’와 ‘방치’가 사라지지 않고 있다. 말을 관리하다 뒷발에 차이고 공장에서 작업하다 사고가 발생해도 숨기기에 급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작업현장에서 발생하는 감전사고의 비율이 매년 40%를 넘지만 관리 상황을 정기적으로 살펴보는 정부부처조차 없다. 기업과 정부의 무책임이 산업재해에 ‘인재(人災)’라는 꼬리표를 붙이고 있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공개한 고용노동부의 산재 미보고 적발 현황을 보면 지난해 산재를 은폐했다가 적발된 건수는 1315건에 이른다. 2015년(736건) 보다 배 가까이 늘었다. 지난해 부과된 과태료만도 35억8700만원으로 전년 대비 약 10억원 증가했다. 그나마 고용부가 119구급대 자료 등 유관기관의 산재 미보고 의심정보를 입수해 조사하지 않았으면 밝혀지지 않았을 일이다.

산재 은폐 적발 건수가 많았던 상위 10개 업체를 보면 경마 관련 사업장이 가장 많다. 서울경마장 조교사협회에서 50건, 한국마사회 부산경남경마본부에서 12건이 적발됐다. 말을 씻기다가 뒷발에 차여 부상을 당한 경우, 말이 요동을 치면서 모래가 눈으로 튀어 부상을 입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

대기업 소속 사업장 사정도 비슷하다. 코오롱인더스트리 김천공장과 GS엔텍이 각각 17건과 12건의 산재를 보고하지 않았다가 뒤늦게 들통났다. 전 의원은 “위반 사업장을 강력히 처벌하고 주기적

‘산업재해 미보고’ 상위 5개 사업장 (2017년, 단위:건)

사업장명	적발건수
서울경마장조교사협회	50
코오롱인더스트리 김천공장	17
GS엔텍	12
한국마사회 부산경남경마본부	12
한국특수현강 칠서제강소	11

〈자료: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

인 근로감독을 통해 산재를 미연에 예방 조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사업장감전사고가 끊이지 않는데도 예방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통계청 감전재해조사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감전사고 피해자(532명)의 41.7%는 공장·작업장, 공사장에서 사고를 당했다. 최근 3년간 매년 40~50%의 감전사고가 작업현장에 집중돼 있다. 지난 8월 한 대형 물류업체에서 발생한 대학생 감전 사망자 사고도 이에 속한다. 고용부가 지난해 1월 물류업체 62곳의 산업안전보건 상황을 감독한 결과 48곳이 법을 위반하고 있었다. 그만큼 ‘안전 불감증’이 심각한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 2016년 1월 시행된 개정 전기안전법에 따르면 매년 1회 이상 전기안전관리업무 실태를 조사해야 한다. 대상 시설은 3만 8485곳에 이른다.

그런데도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의 내년도 조사 예산은 ‘0원’이다. 우 의원은 “산업부가 법을 지켜 실태조사만 철저히 했더라면 안타까운 사고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세종=신준섭 정현수 기자
sman321@kmib.co.kr

국민일보

2018/10/11 목요일
015면 경제

“협력사 임금 격차 해소” 대기업 8곳 6조원 지원

삼성전자와 현대·기아자동차, LG화학 등 대기업 8곳이 올해부터 3년 동안 6조2117억원을 조성해 대·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 줄이기에 나선다.

동반성장위원회는 10일 서울 서초구 쉐라톤 서울 팔래스 강남호텔에서 8개 대기업 위원사, 협력 기업들과 함께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을 통한 임금 격차 해소 협약’을 체결했다.

대기업 위원사는 삼성전자, 현대·기아차, LG화학, 롯데백화점, CJ제일제당, SK하이닉스, GS리테일, 포스코다. 이들은 협약에 따라 ‘협력기업 근로자의 임금 및 복리후생 증진을 위한 직접 지원’(3462억원) ‘협력기업의 전반적 임금지불능력 제고를 위한 지원’(1조7177억원) ‘협력기업의 경영 안정을 위한 금융 지원’(4조1478억원) 등을 이행한다.

아울러 협약 대기업들은 ‘대금 제대로 주기 3원칙’을 준수하기로 했다. 3원칙은 최저임금 인상 및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중소기업 인건비 부담 등을 대금에 반영하는 ‘제값 쳐주기’, 제반 대금을 법 정기일 이전에 지급하고 법정 지급기일이 없는 경우 최대한 이른 시일에 지급하는 ‘제때 주기’,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에 규정된 상생결제 방식에 따라 지급 규모 및 비율을 가급적 확대하는 ‘상생결제로 주기’다.

오주환 기자

東亞日報

2018년 10월 11일 목요일
A14면 종합

대다수 ‘연금 사각지대’

공무원-군인연금 16명 수령
국민연금은 아예 가입 못해

한국의 100세 이상 노인 대다수는 ‘연금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국민연금 유족연금이나 직역 연금 등에 가입한 수 자체가 절대적으로 적기 때문이다. 하지만 100세 이상 노인이 10만 명을 넘어서는 40년 뒤에는 초고령 연금 수급자가 크게 늘어 연금 재정에 큰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이 국민연금공단, 공무원연금공단,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국방부 등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100세 이상 노인 중 연금 수령자는 99명(2.1%)에 불과하다.

연금 수령자 중 60명은 국민연금 유족연금을 받고 있다. 이들이 받는 유족연금은 월평균 21만 8000원이다. 국민연금 가입자가 사망하면 일정 비율의 기본연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합한 금액을 유족에게 지급한다. 수령 1순위는 배우자, 2순위는 25세 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자녀, 3순위는 60세 이상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부모다. 유족연금 수령자 대부분은 국민연금 가입자인 자녀가 사망한 뒤 유족으로 지정된 경우다. 현재 100세 노인은 1918년생으로 1988년 국민연금 도입 당시 70세 여서 본인이 직접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없었다.

100세 이상 연금 수령자 중 유족연금 다음으로 많은 게 주택연금 수령자(20명)다. 주택연금이라면 60세 이상 국민이 주택을 담보로 매달 일정 금액을 연금으로 받는 제도다. 이들의 월평균 수령액은 129만 원이다.

직역연금을 받는 100세 이상 노인은 18명이다. 이 중 10명은 공무원연금 수령자로 1인 월평균 137만5000원을 받는다. 군인연금을 수령하는 6명은 매달 평균 78만5000원을 유족연금으로 받고 있다. 나머지 2명은 사학연금 수령자로 수령액(월 평균 169만9000원)이 가장 많다.

영농 경력이 5년 이상인 만 65세 이상 국민이 자신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생활자금을 매달 연금처럼 받을 수 있는 농지연금의 최고령 수령자는 97세로 아직 100세가 되지 않았다.

현재 100세 이상 연금 수령자는 매우 미미해 연금 재정에 압박이 크지 않지만 40년 뒤엔 상황이 급변한다. 지난해 기준 50대 후반(55~59세) 국민 연금 가입자는 267만8000명에 이른다. 40년 뒤인 2058년에는 처음으로 100세 이상 노인이 10만 명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 이들 중 상당수가 국민연금 수령자일 가능성이 높다. 문제는 올해 8월 국민연금 4차 재정추계 결과 국민연금 기금이 2057년 바닥날 것으로 예측된다는 점이다.

김하경 기자 whatsup@donga.com

경향신문

2018년 10월 11일 목요일
012면 사회

공공기관 ‘임금 절도’ 작년 27억원

근로복지공단도 2명 체불

미국에선 임금을 미루고 주지 않는 걸 체불이 아닌 ‘임금 절도(Wage Theft)’라고 부른다. 하지만 한국에선 임금을 체불한 고용주에 대한 처벌은 약하고 심지어 공공기관들조차 제때 임금을 주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1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임금체불 실태 자료를 보면 지난해 한 해에만 전국 공공기관 51곳이 노동자 910명의 임금 약 27억원을 체불했다. 임금체불이 이례적으로 많아 46억원에 이르렀던 2016년을 제외하면 통상 한 해에 10억원가량의 체불이 발생하는데, 지난해엔 규모가 컸다. 게다가 해가 바뀌어 올 9월까지도 지급되지 않은 돈이 전체 체불액의 24%인 6억5700만원이었다. 임금체불 기관 중에는 노동자가 체불 피해를 입지 않도록 지원하는 근로복지공단도 포함됐다. 근로복지공단은 지난해 노동자 2명의 임금 총 65만5000원을 체불했다가 올해야 내줬다.

대부분 공공기관은 노동부가 정한 시점인 8월 전에 체불임금을 청산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기소당하지 않았다. 임금을 떼인 노동자가 ‘사용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기소하지 않고 지방노동청이 사건을 종결짓는 ‘빈의사불법’ 조항 때문이다. 전현희 의원은 “모범 사용자로서 고용질서를 지키는데 입장서야 할 공공기관이 한 해 수십 억원을 체불하는 것은 큰 문제”라며 “법 조항을 개선해 공공부문 임금체불을 근절해야 한다”고 했다.

이혜인 기자 hyein@kyunghyang.com

中企 “최저임금 올리는 주휴수당 폐지를”

중기중앙회, 정치권에 호소

**52시간 제도 충격 완화 위해
탄력적 근로시간 확대도 요구**

중소기업계가 임금 격차 완화와 경영 환경 개선을 위해 주휴수당 폐지를 추진 한다.

또 근로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 개선

안을 제시하고,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 법 통과를 위해 적극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는 10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제4차 노동인력특별위원회를 열고 근로시간과 최저임금, 주휴수당 제도 등 중소기업계 노동 현안에 대한 개선안을 논의했다.

이날 특위에는 신정기 노동인력특위 위원장을 비롯해 주보원 한국금속열처리 공업협동조합 이사장, 정용주 경기도가구공업협동조합 이사장 등 주요 업종별

중소기업조합 인사 20여 명이 참석했다.

위원들은 특위에서 유급 주휴일 제도(주휴수당)의 불합리성을 지적했다. 주휴수당은 일주일 동안 규정된 근무 일수를 다 채운 근로자에게 유급 주휴일을 주는 것으로, 주휴수당으로 인해 사실상 내년부터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2525원으로 오른다고 업계는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영세기업이나 소상공인은 실제 근로한 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기도 버거운 실정인 데다 노동 환경이 법 제정 당시와 달라지면서 유급 주휴일 보장의 당위성이 낮아졌다는 논리다.

주 52시간 근로 단축에 따른 중소기업의 충격 완화를 위한 대응책도 정부에 요구했다.

근로시간 단축 시 납기 경쟁력이 하락하면서 제조업 위기가 심화할 수 있어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연장근로제 적용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최저임금을 업종별·규모별·지역별로 차등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진한 기자

매일경제

2018년 10월 11일 목요일 A39면 오피니언

노조원 자녀 고용세습 특권 언제까지 보고만 있을건가

노사 단체협약에 노조원 자녀나 배우자에게 일자리를 대물림하는 ‘고용세습’ 조항을 두고 있는 기업이 15곳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현대자동차, 금호타이어 등 노조 영향력이 큰 대기업이 대다수를 차지한다. 김동철 바른미래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서 드러난 것인데 ‘현대판 음서제’인 고용세습 관행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니 어이가 없다. 현행법상 정년퇴직자나 장기근속자 자녀를 우선 채용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다. 이는 채용 과정에서 차별 금지와 균등한 기회 보장을 규정한 고용정책기본법에 위배된다. 특히 청년들이 고용절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일부 귀족노조들이 법을 어기며 벼젓이 일자리를 대물림하고 있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고용세습 조항이 남아 있는 15개 기업 중 민주노총 소속 노조가 9곳, 한국노총 소속 노조는 5곳이다. 양대 노총은 재벌 세습에 대해서는 신랄하게 비판하면서 정작 노조원들의 일자리 세습에는 눈을 감고 되레 이를 주도하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대기업 노조들은 고용세습을 폐지하라는 주장에 대해 노조 탄압이라며 반발

하고 있으니 황당하다. 공정한 취업 기회를 박탈하고 노동시장 질서를 허무는 노조의 이기적인 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하다. 가장 큰 문제는 고임금 강성노조의 기득권 지키기가 사상 최악의 고용 참사로 좌절하고 있는 취업준비생들의 의지를 꺾고 희망을 빼앗고 있다는 것이다. ‘기회의 평등, 과정의 공정, 결과의 정의로움’을 강조하는 문재인정부의 국정 운영 기조에도 크게 어긋난다.

하지만 고용부는 노사 자율 시정에 맡겨둔 채 고용세습 청산에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아무리 노사 합의를 존중한다고 해도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시정 명령을 내려야 하는데 수수방관하고 있으니 이런 폐습이 사라지지 않는 것이다.

고용세습에 대한 처벌이 약한 것도 문제다. 시정 명령을 내린 뒤 개선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는 것이 고작이다. 이런 솜방망이 처벌로는 악습을 뿐리 뽑을 수 없다. 정치권에서 사업장 명단을 공개하고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등 고용세습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준비 중인데 서둘러야 한다.

귀족노조 일자리 대물림 ‘노동 적폐’ 왜 방치하나

비판 여론이 그렇게 따가웠건만 노조원 자녀에게 일자리가 대물림되는 ‘고용세습’은 여전했다. 김동철 바른미래당 의원이 공개한 고용노동부 자료를 보면 고용세습 조항을 버젓이 노사 단체협약에 둔 기업이 15곳이나 됐다. 명백한 불법인데도 정부는 노사 자율 원칙을 내세워 시정명령을 내리지 않았다. 온갖 적폐 관행들이 개혁 대상인 마당에 일자리 대물림만은 어째서 무풍지대인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감독 의지가 없는 고용노동부가 한눈 감아 주는 게 아닌가 의심 할 수밖에 없다.

정년퇴직자, 장기근속자 자녀 등을 우선·특별 대접 하거나 가산점을 주는 채용은 두 말이 필요 없는 불법이다. 신분을 이유로 차별하면 안 된다는 규정이 고용 정책기본법 등에 명시돼 있다. 청년 실업이 단군 아래 최악인 현실에서 부모의 직장을 그대로 물려받는 관행이야말로 ‘현대판 음서제’다. 길 가는 사람 아무나 잡고 물어도 가장 고약한 노동 적폐로 꼽을 것이다.

이번 자료에서 재확인됐듯 비판 여론에 귀를 막고

고용세습을 고수하는 곳은 현대자동차, 금호타이어 등 대기업들이다. 고임금의 강성 귀족노조로 분류되는 이 기업들은 거의 전부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소속이다. 임금투쟁을 할 때는 ‘정의’와 ‘분배’를 그렇게 잘 따지면서 세상이 지탄하는 불평등 관행은 안 보이는지 이들의 양심은 참 편리하게도 작동된다.

강원랜드 등 공기업, 금융계 채용 비리는 온 사회가 경악해 수사 대상이 됐다. 단체협약에 대놓고 고용세습 조항을 유지하려는 행태가 그보다 나을 게 없다. 눈 뜨고 불평등을 감수해야 하는 취업준비생들에게는 이보다 부조리한 세상이 또 없다.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밟다는 말은 고용노동부에 딱 들어맞는다. 위법에 눈감는 정부가 국민 눈에는 더 괴씸하다. 강성 노조 눈치만 살피지 말고 정부는 당장 시정명령을 강화하라. 시정명령을 어겨 봤자 500만원 이하의 벌금만 내면 그뿐인 물렁하기 짝이 없는 관련법도 손질하라. 그러지 않으면 고용세습 방조에 국회도 공범이다.

국민일보

2018년 10월 11일 목요일 023면 오피니언

‘귀족노조’의 고용세습 적폐 언제까지 두고만 볼 건가

노조원 자녀를 우선 채용하는 등의 ‘고용 세습’이 일부 기업에서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좁은 취업문을 뚫기 위해 밤잠을 줄여가며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을 청년 구직자나 가족들로서는 분노가 치밀 일이다.

바른미래당 김동철 의원이 고용노동부 등을 통해 조사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현대자동차, 현대로템, 금호타이어 등 15개 기업이 단체협약에 고용 세습을 보장하는 조항을 두고 있다. 이 기업들은 정년퇴직이나 장기 근속한 조합원의 자녀는 결격 사유가 없거나 다른 지원자와 같은 조건일 경우 우선 채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일정 기간 근속한 조합원이 사망하거나 질병·장애로 근무할 수 없는 경우 자녀나 배우자를 우선 채용하도록 한 곳도 있다. 이들은 민주노총(9곳)과 한국노총(5곳)을 상급단체로 둔 노조들이 대부분이다. 해당되는 기업이 줄어들고 있지만 소위 힘이 센 일부 노조들은 여전히 과거 체결한 단체협약에 따른 고용 세습 기득권을 포기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일자리 대물림은 노사가 합의했더라도 명백한 불

법이다. 균등한 취업기회를 보장하도록 한 고용정책 기본법(7조)과 직업안정법(2조)에 위배된다. 매년 반복적으로 불거지고 비난 여론이 거센데도 고용 세습이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은 정부가 미온적으로 대응하고 처벌도 약하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는 2년 전에도 실태조사를 실시해 해당 기업 노사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응하지 않으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엄포에 그치고 말았다. 단체협약 개정은 노사가 자율적으로 해결할 사항이라며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 유죄가 확정되더라도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고작인 것도 노사가 시정명령을 무시하는 이유다.

고용 세습은 공정한 경쟁을 해친다는 점에서 채용 비리나 다름없다. 불법이 버젓이 행해지고 있는데도 정부가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직무유기다. 고용부는 해당 기업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응하지 않으면 자체 없이 수사 의뢰해 사법처리 절차를 밟는 등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 솜방망이 수준인 처벌 수위를 강화해 강제력을 갖도록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도 망설일 필요가 없다.

하이마트 매장 판촉사원 3800명 ‘불법파견’ 의혹

이정미 의원 국감 자료

10일 오후 서울시내 한 롯데하이마트 매장의 노트북 컴퓨터 코너. 주황색 끈에 하이마트 로고가 선명히 찍힌 명찰을 목에 건 직원에게 사무용 제품을 추천해달라고 부탁해봤다. 직원은 대만 기업 에이수스 제품과 삼성 제품을 추천하며 가격 조건을 안내했다. 다른 브랜드를 찾자 LG와 마이크로소프트 제품의 사양과 가격을 상세히 알려줬다. 명찰에는 사진과 이름, ‘전문상담원’이라는 직함이 써 있었지만 이 직원은 하이마트 소속이 아니다. 진짜 소속사는 삼성전자 협력업체인 ㄱ사다. 이들은 법적으로 자사 제품만

납품업체가 인력업체 통해 ‘2중 파견’… 타사 제품 판매 ‘불법’도 사측 “현장 관리자들 계속 교육… 문제 있는 곳 개선해 나갈 것”

판매할 수 있게 돼 있지만 다른 제품도 자연스럽게 안내하고 판매한다. 사실상 하이마트 직원처럼 일하는 것이다.

국내 최대 가전제품 전문 판매점인 롯데하이마트의 판촉사원 절반이상은 삼성전자와 LG전자, 대우일렉트로닉스 같은 납품업체들이 인력업체를 통해 보낸 파견사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인력공급업체로부터 불법으로 제빵기사를 파견받아 매장에서 일을 시킨 파리바게뜨와 마찬가지로, 불법파견 소지가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의당 이정미 의원이 입수한 하이마트 판촉사원 현황을 보면, 하이마트는 지난 해 기준으로 전국 22개 지사와 460개 지점에서 삼성·LG 등 납품업체로부터 판촉사원 3846명을 공급받았다. 매장에서 물건을 파는 직원의 57%가 이런 판촉사원이다. 납품업체들이 이들을 인력공급업체에서 공급받아 하이마트 매장으로 보내는 ‘2중의 파견’이다.

일은 하이마트에서 하는데 월급을 주는

회사는 인력파견업체이고, 원청은 전자제품업체인 복잡한 구조다.

이들은 하이마트에서 반드시 자신들을 보낸 납품업체 물품만 팔아야 한다. ‘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하이마트 같은 대규모 유통업자는 원칙적으로 납품업체로부터 판매사원을 파견받을 수 없다. 그러나 납품업체가 ‘자발적으로’ 서면 약정 뒤 직원을 보내면 ‘예외적으로’ 파견이 허용된다. 그렇기 때문에 LG전자 판매사원이 하이마트 매장에서 LG전자 것이 아닌 다른 회사 물건을 팔거나 관리하면 불법이다.

하지만 전·현직 종사자들은 현장에서 다른 회사 상품을 팔도록 묵인·조장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고 입을 모은다. 지난 8월까지 하이마트에서 통신사 소속으로 스마트폰 개통·판매 업무를 한 ㄴ씨는 “하이마트로서는 매출이 나와야 하니 뭐가 됐든 팔라고 한다. 자사 제품만 팔았다고 본사 팀장에게 질책을 받기도 했다”고 말했다. 납품업체들이 판매사원들을 직접 고용하는 것이 아니라 인력공급업체를 통해 사람을 보내기 때문에, 사실상 하이마트가 인력업체를 통해 사람을 쓰는 것과 마찬가지다. 하이마트에 직원을 보내는 업체 중에는 파리바게뜨 매장에 불법으로 제빵기사를 파견했던 ‘ㄷ테크’도 포함돼 있다.

▶6면에 계속

남지원 기자 somnia@kyunghyang.com

백화점·대형마트 6곳 인력공급업체만 1만1674개 달해

하이마트 판촉사원 3800명 ‘불법 파견’ 의혹 ▶1면에서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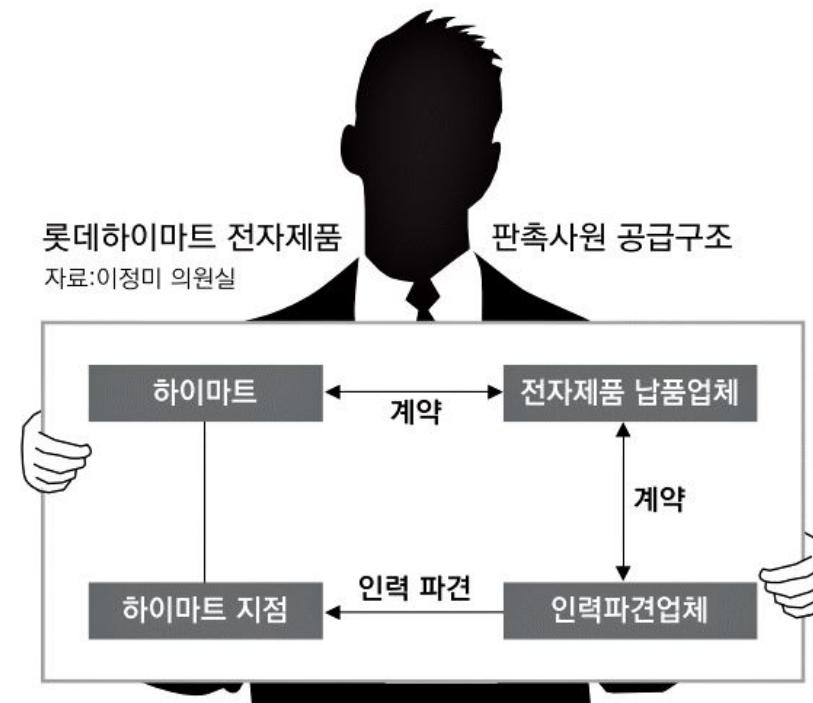
전자제품 판매는 파견법에서 파견을 허용한 업종이 아니다. 고용노동부는 이정미 의원실의 질의에 “인력운용 형태가 실질적으로 파견법상 파견에 해당한다면 파견대상업무위반이므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고, 해당자들을 직접 고용도 해야 한다”고 회신했다.

하이마트는 대규모 유통업법을 엄격하게 준수하도록 현장 관리자들을 교육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하이마트 관계자는 “파트너사들이 이 자사 제품을 판촉하려고 직원 파견을 요청한 것이고, 이들에게 다른 회사 제품까지 팔라는 지시는 하지 않는다”며 “다만 혼수나이사 같은 경우 여러 제품을 한꺼번에 상담하는 일이 있어서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현장에서 그런 이야기가 들려서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현장 관리자들을 교육시키고 원칙을 설명했

는데, 아직 그런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면 개선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납품업체로부터 편법으로 파견사원을 받아쓰는 행태는 대형마트와 백화점에도 퍼져 있다. 롯데·신세계·현대백화점과 이마트·홈플러스·롯데마트는 각기 백화점과 대형마트의 ‘빅3’로 불린다. 공정거래위원회의 대형유통업 납품업체 판촉사원 현황 자료를 보면 이 6곳에 판촉사원을 파견하는 인력공급업체만 1만1674개에 달한다. 6개사 매장 판촉사원 15만명 중 상당수가 인력공급업체 소속으로 추정된다. 식료품이나 음료 판매업 역시 파견대상업무가 아니고 이들이 백화점·마트나 납품업체로부터 업무지시를 받는다면 불법파견 소지가 있다.

대형 유통업체들의 불법파견 행태를 감독해야 할 정부는 지금까지 손을 놓고 있었다. 지난 7월 활동을



종료한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 활동보고서를 보면 노동부는 2013년 이마트 본사를 특별근로감독했지만 납품업체 협력사원들은 직접 고용 시정지시 대상에서 제외됐다. 2016년에도 노조가 파견법 위반 특별근로감독 청원을 했으나 근로감독관 한명이 현장조사를 한

뒤 불법파견이 아니라며 종결해버렸다. 이정미 의원은 “대기업과 대형 유통업체들이 판매사원을 고용하지 않으면서 법의 허점을 이용해 저임금 불법파견 등 간접고용을 일삼고 있다”며 “이제라도 정부가나 서서 실태를 조사하고 불법적 요소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100세이상 10명중 9명꼴 재산 '0원'… 기초연금-자식이 생명줄

〈下〉 빈곤 시달리는 '장수세대'

A 씨(81·여)는 치매와 자체장애를 지닌 어머니 전모씨(100)를 10년째 훌로 모시고 있다. 전 씨가 몸을 가누지 못해 A 씨가 속옷과 이불을 갈아준다. 별도의 재산은 없다. 별이는 기초연금이 고작이다. 전남 고흥군의 한 사찰이 병을 내주지 않았다면 모녀가 의탁할 곳은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전기요금이 아까워 한겨울에도 전기장판조차 땀놓고 틀지 못한다. A 씨는 "사는 게 뭔지 모르겠지만 어머니처럼 오래 살고 싶지는 않다"고 했다.

● 100세 이상 98.8%가 월 소득 '0원'

100세 넘게 장수하는 '호모 헌드레드(Homo Hundred·100세 인간)' 시대가 오고 있지만 현재 100세 이상 노인은 심각한 절대빈곤에 시달리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난해 건강보험료 산정을 위해 파악한 국내 100세 이상 노인 4753명의 재산 명세를 보니 이들의 평균 재산은 1712만 원에 불과했다. 그러나 토지가 1120만 원, 주택이 460만 원으로 당장 현금화하기 힘든 재산이 대부분이었다.

특히 100세 이상 노인 중 1%인 47명이 보유한 재산 587억7304만 원을 제외하면 나머지 99% (4706명)의 재산은 1인당 평균 480만 원에 그쳤다. 지난해 국민연금연구원이 조사한 80대 이상 고령자 1인 가구의 최소 생활비는 월 81만6000원, 연 979만2000원이었다. 1년 치 최소 생활비라도 보유한 100세 이상 노인은 342명(7.2%)에 불과했다. 전 재산이 0원인 100세 이상 노인은 무려 4097명(86.2%)이나 됐다.

기초연금을 제외하고 예금 이자 등 별도의 수입이 있는 100세 이상 노인을 찾기는 더 어려웠다. 4753명 중 98.8%인 4698명의 월 소득이 0원이었다. 94.1%인 4474명은 기초연금으로 월평균 20만4623원을 받았다. 100세 노인 대다수가 생계를 국가와 후손에게 의존하고 있는 셈이다. 이는 100세 이상 노후를 준비한 이가 거의 없다는 의미다.

● '홀로 사는 100세' 20년 안에 9배로

현재 100세 이상 대다수는 자녀나 손자녀가 많다. 전남 해남군 큰아들 집에서 사는 김모 씨(100·여)는 매달 15만 원기량 병원비를 쓰지만 여섯 자녀가 나눠 부담해 자녀들의 부담이 크지 않다. 김 씨 역시 자기 수중에 돈이 없지만 생계에 큰 어려움이 없다.

베이비부머(1955~1963년생)가 100세가 될 즈음엔 얘기가 달라진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100세 이상 홀몸노인은 961명으로 추산된다. 10년 전인 2008년(87명)보다 11배 늘었다. 100세 이상 홀몸노인은 2038년 8391명, 2041년 1만373명, 2045년 1만2498명으로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소득도 가족도 없는 노인에게 기초연금은 최후의 보루다. 내년 기초연금 예산은 11조5000억

원이다. 향후 노인 인구, 특히 소득 없는 노인이 급격히 늘면서 2045년 기초연금에 들어갈 예산은 120조 원이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 때문에 일부 전문가는 기초연금제도의 지속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한다. 자손에게 의지할 수 없는 초고령자들을 국가가 모두 떠안을 수 있을지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는 얘기다.

● "95세까지 산다고 보고 노후 준비해야"

재무 전문가들은 노후 필요자산을 계산할 때 자신의 기대수명보다 10년 더 살 것으로 가정하고 조언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현재 65세인 한국 여성은 88세까지, 남성은 83세까지 살 것으로 예측된다. 기대수명이 계속 늘어날 것을 감안하면 지금 40, 50대는 자신이 95세까지 산다고 가정하고 노후를 준비해야 한다는 뜻이다.

아직 국민연금에 들지 않은 자영업자나 전업주부가 있다면 하루빨리 가입해야 한다. 국민연

1인 생활비 月 81만원 필요한데

1년치 확보한 어르신 7%에 그쳐
대부분 병원비 등 지출 큰 부담

2045년 '독거 100세' 1만2400명

개인연금 등 노후대책 서둘러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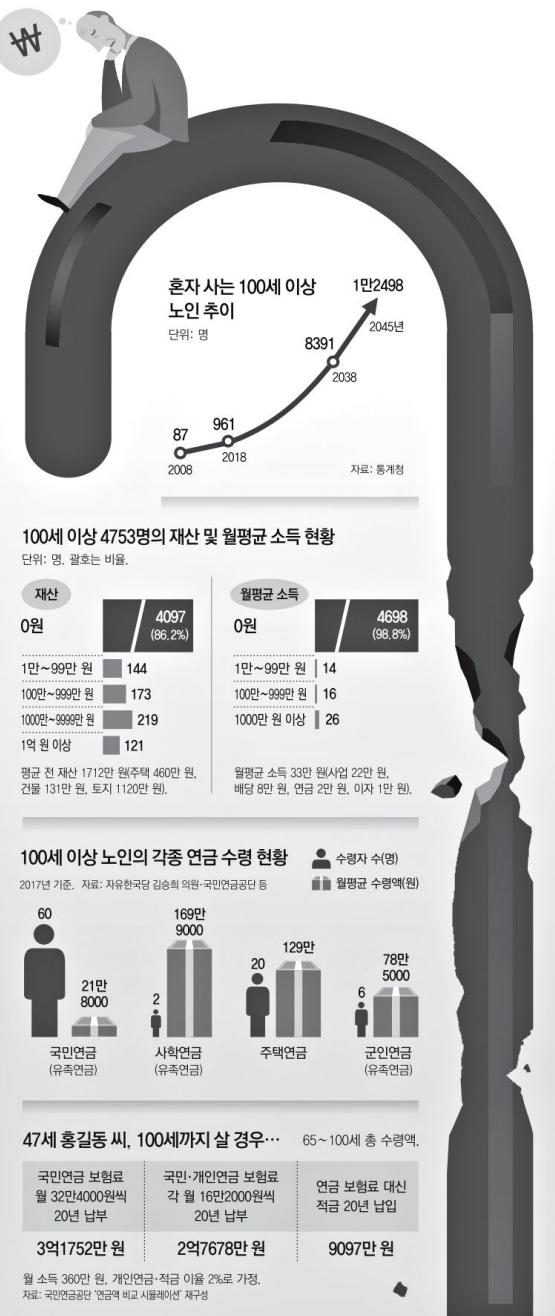
전문가 "기대수명보다 10년 더 준비"

금은 보험료 대비 수령액의 비율인 수익비가 1.9 수준으로 개인연금보다 월선 높다. 30, 40대라면 자기 소득의 30% 정도를 연금으로 부으면 노후 걱정이 없다. 회사원이라면 소득의 9%가 국민연금으로, 8%가 많이 퇴직연금으로 자동 납부되거나 나머지 13%를 개인연금에 투자하면 된다.

연금에 전혀 가입하지 않은 50대라면 개인연금과 개인형퇴직연금(IRP)을 세액공제 한도(각 연간 400만 원, 300만 원)까지 넣고, 부족하다 싶으면 여유자금을 IRP 이자세 혜택 한도(연간 1100만 원)까지 추가로 적립하거나 개인종합자산관리계획(ISA)를 알아볼 것을 권한다.

은퇴할 때가 됐는데 모이둔 돈이 없다면 노후 필요자산 자체를 줄이기 위해 허리띠를 졸라매는 수밖에 없다. 최근 1년간 카드 사용 및 출금 명세를 친친히 들여다보면 불필요한 지출을 줄일 수 있다. 질병 치료를 위한 돈은 따로 모아두는 게 좋다. 국민연금공단 자리를 찾아가면 재무와 건강 등 노후 컨설팅을 무료로 해준다. 박진 NH투자증권 '100세 시대 연구소' 소장은 "은퇴 후 40년이 인생의 '보너스'가 되려면 젊었을 때부터 돈을 쓰고 모으는 방식이 잘못되지는 않았는지를 틈틈이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간희 기자 becom@donga.com



“이재명의 청년국민연금, 사회보장 원칙에 위배”

박능후 복지장관, 국감서 비판

경기, 18세 첫 국민연금 대납 추진

박 장관 “도입 밀어붙이면 위법”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재명 경기도 지사가 추진하려는 청년국민연금제도를 “사회보장제도의 근본 원칙에 어긋나는 제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10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다. 박 장관은 이날 오후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이 경기도가 시행하려는 청년국민연금제도에 대한 장관의 생각을 묻자 “사회보장위원회에 협의가 들어오면 타당성이라든지 합리성, 제도의 지속가능성 등을 검토해 보겠다”며 이렇게 말했다.

경기도는 최근 청년국민연금제도 예산

을 편성해 내년에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만 18세 청년에게 경기도가 생애 첫 국민연금 보험료를 대납해 주는 제도(추납제도)다. 추후에 보험료 납부 여력이 생겼을 때 낼 수 있게 된다. 한번이라도 납부하지 않으면 추후 납부가 불가능하다. 추후 납부하면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늘려 노후연금액이 올라간다.

이재명 지사는 4월 경기도 만 18세 인구 16만여 명 전원에게 국민연금 보험료 9만 원을 내주겠다고 발표했다. 10년 후 과거 보험료를 추납하면 65세에 연금을 수령할 때 추납하지 않았을 때보다 7800만원 가량 더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김순례 의원은 “이 지사 재임 동안 제도를 유지할 경우 4년간 64만 명이 혜택을 받게 되고 1인당 최저 7800만원을 추가로 연금을 받으면 약 50조원이 연금 재정에서

추가 지급되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또 “이 제도는 국민연금 추납제도의 본연의 취지를 뒤엎는 정책”이라며 “집권 여당의 전해철 의원도 지난 (경기지사 경선) TV토론을 통해 ‘연금은 일정 소득이 있을 때 가입하는 것인데 소득이 없을 때 주는 것은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고 비판을 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 지사가 유권자들에게 연금을 퍼주기 위해 존재하는 제도는 아니지 않느냐”고 물었고 박능후 장관은 “네”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저는 사회보장제도의 근본원칙에 어긋나는 제도는 도입이 힘들다고 생각한다”며 “그 정도는 해당 지자체에서 스크린(걸러낸다는 의미)이 되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경기도가 협의하지 않고 제도를 밀어붙일 경우엔 어떻게 하겠느냐”는 김 의원

의 질의에 박 장관은 “그것은 위법사항이니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와 이재명 지사의 충돌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이 지사가 성남시장을 지내던 지난 2016년 강하게 충돌했다. 당시 복지부는 성남시의 청년배당, 중학생 무상 교복지원, 산후조리원 등을 강하게 반대했다. 당시 사회보장위원회와 복지부는 “세금이 불필요하게 쓰이지 않게 지자체의 복지 포퓰리즘적 사업을 지속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용하 순천향대 IT금융보험학과 교수는 “지자체가 청년에게 적은 돈을 내고 많이 받아갈 수 있게 제도의 허점을 가르치는 것은 결코 권장할 만한 일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승호 기자

wonderman@joongang.co.kr

올 들어서만 다섯 번째… 현대重 노조, 오늘부터 또 파업

노사, 해양사업본부 등 구조조정 대립… 임단협도 2개월 이상 ‘휴업’

현대중공업 노동조합이 올 들어 5차 파업에 돌입한다. 이 회사 노사는 일감 부족으로 가동을 중단한 해양사업본부와 실적 부진에 시달리고 있는 현대일렉트릭의 유급 휴직 등 구조조정을 놓고 대립하고 있다.

현대중공업 노조는 11일 오후부터 중공업 3·5지단(공정별 조직)과 현대일렉트릭의 네 시간 파업을 시작으로 구조조정 분쇄 파업에 나선다고 10일 밝혔다. 노조

부분파업 뒤 17~18일 전면파업

**4년 만에 해양플랜트 수주
내년 하반기에나 야드 작업**

는 12일(중공업 1·2·3지단)과 15일(중공업 1·2지단, 지원설계), 16일(해양, 현대건설 기계)까지 사업부별로 네 시간씩 부분파업을 벌인다. 이어 17~18일 양일간 네 시간씩 전면 파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현대중공업은 지난 8월 아랍에미리트(UAE) 나스르 원유생산설비를 끝으로 해양사업본부 일감이 바닥났다. 회사 측은 조업을 중단한 해양사업본부 유휴인



력 2000여 명에 대해 희망퇴직을 실시한 데 이어 1220명을 대상으로 평균 임금의 40%를 지급하는 유급 휴업 계획안을 울산지방노동위원회에 신청했다. 노조는 해양사업본부 유휴인력의 조선사업본부 배치 등을 요구하며 맞서고 있다.

구조조정에서 족발된 노사 갈등은 올해 임금·단체협상으로도 옮겨 붙었다. 현대중공업 노사 임단협은 여름휴가 전인

지난 7월24일 21차 교섭을 끝으로 2개월 넘게 열리지 않고 있다. 노조는 기본급 7만3373원 인상 등을 요구하는 반면 사측은 기본급 동결 및 경영 정상화 때까지 20% 반납을 제시해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지난 8일 울산시 중재로 노사정 회의가 처음 열렸지만 노사 합의가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현대중공업은 이날 미국 석유개발업체

엘로그가 발주한 5130억원 규모의 반잠수식 원유생산설비 공사를 수주했다고 공시했다. 2014년 11월 이후 4년 만의 해양플랜트 수주에도 불구하고 해양사업본부 재가동은 내년 하반기에나 가능할 전망이다. 설계 기간만 1년 이상 걸리는 해양플랜트 특성상 야드(작업장) 공정이 내년 하반기에나 시작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